

실직 졸업생에 대한 보수교육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

정철영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수



1. 대량실업은 국가적 문제

I MF의 한파 속에서 우리나라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혹자는 현재의 상황을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까지 하고 있다. IMF 체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가 실업문제이다. 실업자가 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용직 실직자나 고용보험 대상 외의 실직자를 합하면 이미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기도 한다. 1가구를 4인 기준으로 볼 때, 200만 명의 실업자 문제는 800만 명의 문제이고 여기에 실직자와 가까운 친척을 보태고 그에 파생되는 결과를 고려하면 실직자의 문제는 국민 전

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을 우려한 나머지 식당에 가서 조기탕이나 명태탕을 시키지 말라던 우스갯소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러한 우스갯소리를 할 여유조차 없이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이고, 현재 실직자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직이 예고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식을 할 엄두조차 못 낼 뿐만 아니라 조기탕이나 명태탕을 내올 식당마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자 대책으로 7조 9천억 원을 책정하고, 이 중 7,254억 원을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기

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단기간에 쏟아 붓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실직자 재교육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예견되었고, 또한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처럼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그 문제점을 이유로 대학에서의 실직자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이다.

2.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

실업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최대 과제이며 대학이 실업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 들어 가게 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이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대량실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데 일조를 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시급한 실직자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대학은 고학력 전문인력의 재교육 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실직자 재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 실직자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도 대학은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왔다. 이는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그 동안 대학이 수행해 왔던 사회봉사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실직자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의 실직자 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실직자 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실직자의 재취업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즉, 대학 실직자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실제로 재취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실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사설학원,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기관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과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취업 알선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직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시장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유도 및 평가 관리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

한 취업 알선을 확대하면 그만큼 실직자의 재취업은 용이해질 것이다. 물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익과 대학 편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부실하게 운영하여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재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적용되면, 실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학의 프로그램은 유지·발전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앞서 언급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둘째, 현재 대학의 당면 과제인 경쟁력 제고에 실직자 재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뜰이나 대학교육의 질과 시설이 열악한데, 실직자 교육마저 할 경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시설은 특정 시간, 특정 요일, 특정 계절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과 후,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사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실직자 교육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은 학문의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실직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인사의 교육 참여를 통하여 대학이 얻게 되는 이익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직자 재교육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직자 재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학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셋째, 대학의 실직자 교육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정된 일자리를 고려할 때, 실직자들의 재취업 확대는 결과적으로 신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직자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의 부모, 형제이거나 대학 졸업생들이다. 우리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 형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실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로 확대되면 대학생들의 신규 취업은 물론 대학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실직자들의 재취업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분야의 창출에 기여하므로 실직자들의 재취업 확대가 반드시 대학생들의 신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 외에도 금년 들어 재취업 교육을 받은 실직자의 43%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졸업생인 실직자의 재교육을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3.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그런데 장기간 계획하고 준비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학 실직자 재교육은 당분간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대학에서 실직자 재

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사회와 대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 실직자 재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재취업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담당 강사 및 교육방법의 선정이 대학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재취업에 적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노동부, 실직자 교육 실시 대학, 산업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와 원활한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실직자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 기관들 중에서 특히 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직자 재취업 교육에 대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한 평가를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제반 여건을 갖춘 대학만을 엄선하여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실직자 재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업적을 내는 대학에 대

해서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인센티브 제공, 대학 평가시 반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대학이 실직자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대학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 사회교육원의 교육비는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크고, 시설 관리 유지비(감가상각비, 동력비)의 엄밀한 산출이 불가능하며, 기숙사비 등의 항목은 그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소요 경비 항목의 신속적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교육훈련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직된 행정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실직자 교육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대학들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 대학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철영/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과장을 맡고 있다. "조기 퇴직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의 실태와 발전방향", "산학협동센터의 모형에 관한 연구"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